

ICT 접근성 향상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출발이 늦었

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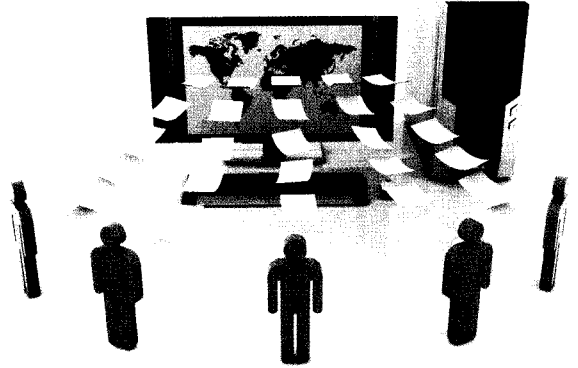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ICT EXPERT INTERVIEW



최 두 진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운영위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사회통합지원단장



Q1 정보통신 접근성이란 무엇이며, 정보통신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보통신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체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교육, 구직 등 오늘날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은 필수 생존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구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하여 장애인과 고령자 등은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실시한 장애인과 고령자(장노년층)에 대한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53.5%, 고령자는 39.3%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과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한 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의 기회가 제한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금까지의 정책추진 사항과 최근 정부의 정책 동향은?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년)을 제정하여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다 세부적인 기술 지침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 등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금년 9월에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행정안전부 고시로 제정하는 등 정보통신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술 표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웹 접근성 기술적 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자문 서비스, 웹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등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민간부문까지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스마트폰, IPTV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기구의 활동 및 2011년 중점 추진과제는?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은 2002년에 창립되어 국내 30여 개의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등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표준을 만드는 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2건의 국가표준 및 10건의 단체표준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으로 매년 접근성 세미나 및 캠페인을 개최하여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정보통신 접근성 동향 및 신기술에 대한 분석으로 W3C(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 ITU, ISO 등 국제

표준화 기구와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추진하는 접근성 관련 표준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포럼의 중점 추진과제는 정보통신기술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적용입니다. 이에 따라 웹 관련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적용하여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개정(행안부고시, 2011.7)을 지원하였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정(행안부고시, 2011.9)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미국 재활법 508조 등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4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만든 표준 중에서 이미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을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 포럼에서 제정된 접근성 관련 12개 표준 중에 현재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표준은 2가지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과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입니다. 해당 표준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접근성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말에 제정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은 웹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사용자가 불편없이 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 4개의 원칙, 13개의 지침, 22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국내의

모든 웹 사이트는 이 지침을 표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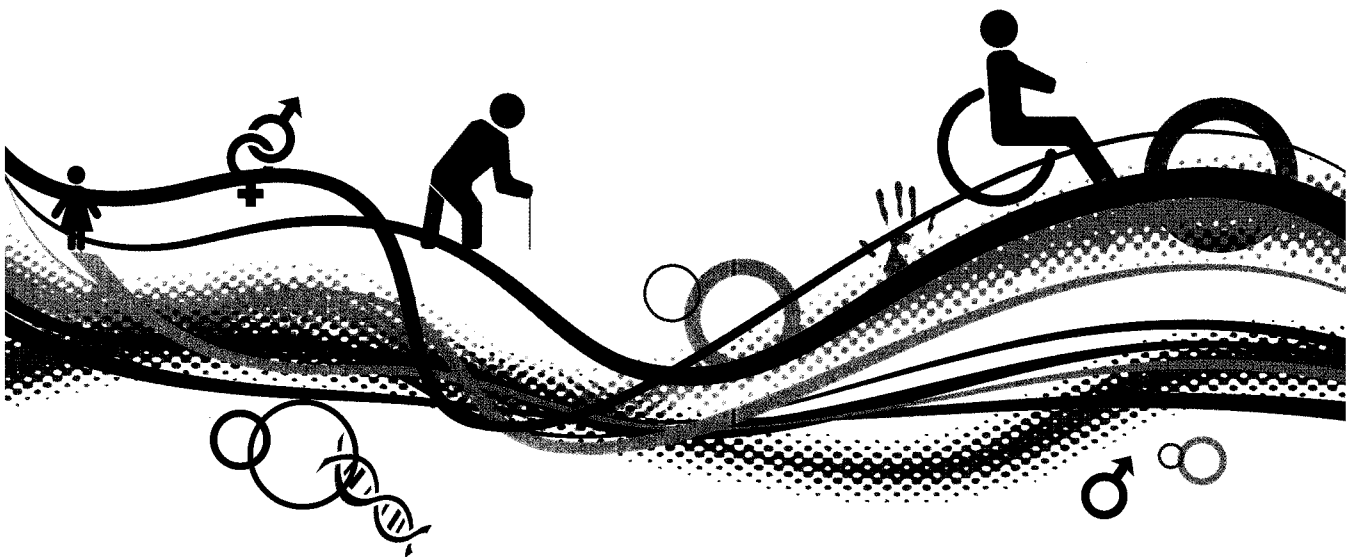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은 은행 및 기타 공공 시설 등에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장애인, 노인 등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적용한 설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보편적 설계, 호환성 등에 대한 1개의 일반사항과 시력의 보완 및 대체, 전맹용 화면 등 6개의 세부기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신한은행, 농협 등의 국내 은행에서 해당표준을 참조하여 금융자동화 기기를 제작 및 보급하여 시각장애인의 사용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이며, 두 번째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수입제품 대체 및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24종의 제품을 개발해 고가의 수입제품을 대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중계서비스(TRS :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접근성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 사업이 '웹 접근성 실태조사'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입니다.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매년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결과는 조사 대상기관의 웹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또한 정부의 웹 접근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는 웹 접근성 3단계 심사(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장애인 사용자심사)를 모두 통과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총 571개 사이트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Q6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과 향후 중점추진 방향은?

현재 여러 정책 및 사업의 결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웹 접근성은 많은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은 낮은 수준이며, 웹 외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에서는 크게 2가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접근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법·제도 때문에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처럼 향후

접근성은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점과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를 감안하면 접근성 없이는 정보통신사업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접근성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 제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스마트 TV, 스마트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최근 국제표준 동향 분석, 이해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접근성 연구 및 표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